

No. 26

IIRI Online Series

북·러관계에서 오는 한국의 안보 도전

김덕주
국립외교원 교수

2016.01

북러관계에서 오는 한국의 안보 도전

김덕주 | 국립외교원 교수

I. 문제제기

소연방 해체 이후 친서방 외교정책을 펼친 러시아는 자국의 체제개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였고, 북한보다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는 바 북러 관계는 상대적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면서 실리외교를 중시하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에 있어서 등거리외교 전략을 구사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과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 복귀라는 양국 정상외교의 교체는 새로운 북러관계 정립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지도자에 오른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이 공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고 적극적인 대러정책을 펼친 만한 여유가 없었다. 반면 푸틴은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하산-나진 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부두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등 북한과의 협력 기반도 착실히 확대하는 실리적 접근을 지속하였다.

2014년에 접어들어 고위층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북러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 시기로부터 유래하는 110억 달러 상당 북한 채무의 9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잔액은 ‘지원을 통한 채무변제’ 방식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는 교육, 의료, 에너지 등 분야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북한 측에 큰 호의를 베풀었다.¹⁾ 한편 11월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면담하였으며, 동행한 노광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과 회담을 하는 등 군사 분야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방문은 2014년 들어 급속히 강화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한 차원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 외교통상부, 『러시아 개황 2013』 (서울: 외교통상부), p.185.

북·러 양국은 해방 7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년을 맞이하는 금년 2015년을 ‘북·러 친선의 해’로 선포하여 모스크바와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공동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정치·경제·인문 등의 분야에 걸친 양국 관계를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으로부터 제재와 압력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과 장성택 처형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국 관계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다시금 침체기로 접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의 진출이 막힌 러시아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극동 지역으로의 관심 및 진출과,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이거나 중국의 대안으로서 러시아를 고려할 수 있는 북한의 이해가 합치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양국이 역사적으로 군사 및 방산 협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왔고 최근 양국의 경제 상황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가 노정되는 것을 볼 때 이는 우리 안보에 대한 큰 도전이라 할 것이다.

II. 북·러관계 차원의 안보 도전

북한으로서는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대미, 대남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다가 중국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상황에서 당분간 숨통을 트고 국면전환을 위한 시간 벌기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력과 이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일정 정도 벗어나 보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공급을 포함하는 실리적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전술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러시아는 이미 푸틴 집권 2기인 200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의 일방주의와 NATO의 지속적인 동진정책에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²⁾ 이러한 반감은 서방과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면서 러시아로 하여금 유라시아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하였으며, 2012년 집권 3기와 더불어 천명한 ‘신동방정책’은 아시아 중시라는 러시아의 외교 노선을 개념화하였다.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에 따르면 세계 정세의 축이 아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러시아는 아태 지역 통합과정에 적극적 참여, 시베리아 및 극동 경제 발전, 역내에서의 다자 안보구조 창출 시의 기여 등을 천명하고 있다.³⁾ 러시아는 지역 질서의 재편과

2) 장덕준, “최근 북·러관계의 변화: 현황, 동인,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러시아연구』 제2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p.293.

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archive.mid.ru/brp_4.nsf/0/6D84DDEDEDBF7DA644257B160051BF7F

정이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러시아의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유사한 개념이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므로 수사학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극동개발부 신설, 대규모 극동개발 프로젝트의 가동, 정치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러관계의 강화, 몽골 및 CIS 국가와의 유기적 경제협력 모색 및 외교관계 확대 등 이후 전개된 러시아의 중요 정책들에서 이전과는 다른 구체적 징후들이 발견되었다.⁵⁾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낙후된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을 골자로 한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4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를 계기로 한반도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⁶⁾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자국의 존재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중러협력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관계로 강화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일정 부분 상쇄시킬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부쩍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 서방 관계 악화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푸틴 정권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극동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극동 지역에 정책수행의 우선권을 두었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 및 경제적 이익 등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러시아는 현재 추진 중인 군개혁과 ‘국가무장계획 2020’을 연계하여 역내에 존재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과 함께 유사시 타지역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동원 체제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⁷⁾ 즉 극동 지역의 군사력은 전략 및 전술핵무기를 기반으로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군을 현대화하고, 미국 및 일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및 전술잠수함, 신형 항공기, 방공무기 현대화에 주력하면서 아울러 역내 배치된 군사력의 즉각 사용이 가능토록 자체 및 연합훈련

4) 김열수·김경규, “주변국(중·일·러)의 대외·국방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통권 제6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p.22.

5) 이용권, “러시아, 신동방정책 추진 이유는?,” 『통일 한국』 2015년 2호, 통권 제374호 (평화문제연구소, 2015), p.58.

6) 현승수, “북·러 관계 전망,” *Online Series*, CO14-22 (통일연구원, 2014년 12월 31일), p.2.

7) 국가무장계획(State Armament Program)은 정부 방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작성하는 정부문서로서, 군 및 각종 무장부대에 소요되는 무기 및 장비에 대한 개발, 생산, 공급계획임. 본 문건은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본문에 대한 접근은 불가하며, 관련 책임자의 단편적 발언, 언론보도, 전문가들의 연구논문 등을 통해 개략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김규철, “2020년경 러시아 극동 군사력 전망과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4), 101~102쪽에서 재인용.

과 전략동원체제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2012년 11월 국방장관으로 부임한 쇼이구는 군개혁 결과 점점 및 객관적인 전비태세 수준 평가를 위해 불시점검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특히 자바이칼 변경의 추콜 지역과 사할린주의 우스페놉스키 지역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극동 지역은 인구 산업화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지역 내의 군사력 유지 문제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역인 바, 특히 소련 시대에는 군사기지 및 방위산업체의 발전이 지역의 인프라 및 주민 생활 향상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⁸⁾ 신동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극동 지역의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 정부의 필연적인 과제가 되었으므로, 군사 인프라 및 군수 산업 기지의 개발은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적 구조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에도 적지 않은 관심과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제도적인 관점에서 2001년 4월 김인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양국 간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 협력 협정」과 「2001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법적 기초를 다시금 정비하였다.

2014년에는 양국 관계 개선과 위협한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러 위협 군사활동 방지에 관한 협정」 체결을 협의하였다. 동 협정은 양 국가 간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충돌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협정 국가 간 영토에 군사 장비 및 인력이 투입되는 등의 군사적 행동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⁹⁾

금년 1월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북한을 비롯한 브라질, 베트남, 쿠바와 대규모 군사회담을 하고 총참모장 수준에서 접촉을 확대할 것이며 이들 국가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제사회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에 대응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러시아 국방부의 우선순위를 재검토 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 동반 국가들과의 접촉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하였다.¹⁰⁾

러시아 외교부는 북·러 간 당장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노동신문은 2015년에 북·러 양국은 정치적·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술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¹¹⁾

8) 김규철 (2014), p.120.

9) “러시아 북한과 ‘위협군사활동 방지에 관한 협정’ 체결 예정,” 러시아의 소리, 2014년 12월 16일.

10) “러시아,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실시 계획,” 러시아의 소리, 2015년 1월 30일.

11) 서울경제 디지털 미디어부, 2015년 1월 31일.

III. 한국에 대한 도전

1.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구도 정립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북·러 협력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러관계와 결합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정립될 수 있는 바, 이는 우리 안보환경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 중·러관계는 실리에 입각한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은 향후 자국의 경제발전 및 국제적 지위의 제고를 위해서는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 기반 위에서 ‘준군사 동맹’이라 일컬어지는 양국 간 군사 안보협력은 양국 관계의 핵심적 요소이자 양국 관계 발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¹²⁾ 특히 최근에는 양측 지도자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한·미,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동중국해 북부 수역이라는 민감한 해역에서 합동 해양 군사훈련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태도를 시현하고 있다.¹³⁾

한편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한 이후 지금까지 북·러 간 군사훈련은 없었으나, 북한군의 훈련 수준을 끌어올리고 유명무실해진 ‘북·러 군사동맹’의 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전술한 러시아의 군사훈련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러 군사훈련 추진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위협할 여지도 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했을 때 북·러 양국이 떠안게 될 부담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외세와 야합한 것’이라고 맹비난해 왔는 바, 만일 북·러 군사훈련을 실행하면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해 온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강하게 비판해 왔는 바, 북한과의 군사훈련은 ‘북한 두둔하기’로 비춰질 수 있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이미지는 추가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러 간 군사훈련이 실시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다시금 냉전 시대로 뒷걸음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러시아의 무기 수출 등 북·러 군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¹⁴⁾

북·러협력을 한 축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구도가 정립될 경우, 북핵 문제의 해결

12) 김태호, “중·러 군사관계의 긴밀화와 동북아/한반도 안보,” 『Strategy21』 제9권, 제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p25.

13) “합동군사훈련, 러시아-중국 군사정치 협력관계 전시효과,” 러시아의 소리, 2014년 5월 19일.

14) 정육식, “우려스러운 북한-러시아 합동군사훈련,” 『프레시안』, 2015년 2월 5일.

과 이를 위한 6자회담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지역 정세의 불안을 야기하여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 활동을 저해할 것은 물론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폭발하여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무력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 북·러 군사 및 방산 협력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북한의 작전능력 확대와 무기 현대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은 2001년 4월 김인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 협력협정」과 「2001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소원해진 러시아와의 군사 및 방산협력의 개선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경제원칙을 고수하는 러시아의 기준을 충족치 못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북·러 간 군사 및 방산협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북한은 여전히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동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은 1960년대 말 소련과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원조합의」를 법적 기반으로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소련의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SA-2A 지대공 미사일을 바르샤바 조약국을 제외하고 중국과 쿠바에 이어 3번째로 배치 받았으며, 당시 소련은 시스템 조립과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했다.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확인하고 양국 간 미사일 기술 협력 및 교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대항하여 북한-러시아-중국 ‘삼각 미사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탄생된 미사일이 바로 북한의 ICBM 대포동-2호 미사일이다.¹⁵⁾ 이와 같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의 기초를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소련방 붕괴 후 갈 곳이 없었던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를 영입하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하였다.

북한은 2015년 5월 비록 ‘북극성-1’ 호 모의 탄도탄이 150-200m 날아가는데 그쳤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는 신포에서 지상 미사일 수직 발사 시험 시설이 공개되었고 2014년에는 수상에서 시험 발사하던 장면이 포착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중시험을 공개했다.¹⁶⁾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는 아직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없는데, 스콧 스워프트 미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15) 김필재, “러시아의 지원으로 완성된 북의 장거리 미사일,” 『조갑제 닷컴』, 2014년 11월 18일.

16) 김열수, “북한 SLBM에 대응한 정책방향과 군사적 대비책,” 2015년 5월 20일. <http://blog.naver.com>.

밝혔다.¹⁷⁾

그런데 SLBM 개발을 위하여 북한은 SS-N-6(러시아 명은 R-27, 한·미 양국은 ‘무수단’ 미사일로 호칭)를 새로운 형태로 개조하고,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동 미사일과 잠수함의 원천 기술은 모두 소련·러시아 것이다.

한편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북한이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장비 4,800대를 파괴한 2013년 3월 20일 사이버 테러 직후, “북한의 전자전사 전면 공격 시 남한 주요시설은 5분 내 초토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¹⁸⁾ 그런데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014년 7월 23일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004년 러시아가 북한의 EMP탄 개발에 도움(두뇌 유출)을 줬다고 미국 측에 알려졌다”고 밝혔으며, 금년 3월 방한하여 “북한의 EMP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야 또다시 실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⁹⁾ SLBM에 이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북·러협력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3. 비전통적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시 푸틴 대통령이 전개한 일련의 ‘전술’을 놓고 기존의 전쟁 개념과는 다르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러시아의 군사 전략을 소위 ‘모호한 전쟁(ambiguous warfar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적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비정규군을 사용하고 사이버 공격 및 정보전을 감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공격은 전면적인 침공이 아니고 대신 러시아권 매체를 이용해 리투아니아 내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선동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비정규군을 투입하여 리투아니아의 기초적인 국정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방식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한다.²⁰⁾

한편, 우크라이나 노보아조프스크에서 러시아는 수세에 몰린 친러시아 반군 세력들에게 탱크와 화포를 제공하며, 은밀하지만(stealthy), 단결된(concerted) 공격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전복(subversion)과 위장술(feint)을 구사하였는 바, 일부는 이러한 접근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라고 명명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소속 불명 특수부대 요

17) 『연합뉴스』, 2015년 7월 20일.

18) 오청균, “사이버전쟁, 북한은 이미 부산까지 점령했다,” 『뉴데일리』, 2015년 7월 26일.

19) “북 EMP탄 대비 안 하면 후회,” 『세계일보』, 2015년 3월 1일.

20) “The Russian Threat to NATO,”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4, 2015.

원들에 의해 충돌이 발생하고, 무장 군인들이 밤중에 국경을 넘고, 거짓된 프로파간다 정보들이 퍼지고, 불의의 습격이 빈번히 발생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여느 전쟁과 같이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침략자가 누구인지 기만 속에 가리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적의 약점에 집중하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대치를 피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비대칭적 대응을 한 것이다.²¹⁾

푸틴 대통령이 구사한 전술은 전통적 개념에 따른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큰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술이 북한에게 전수될 경우 우리에게는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4. 재러 탈북자

북한 노동력의 대러 송출은 북·러 간 교역이 미미한 가운데에서도 양측 간 경제협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2007년 8월 체결된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러시아 내 유효한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규모는 2012년 상반기 기준 2만여 명으로 파악되나, 실제 규모는 러시아 내 노동 수요 및 북한 정세 등 여타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다.²²⁾

그런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농지를 임차한 후 북한 노동력과 장비를 이용해 농사를 지은 뒤 생산물 일부를 본국으로 가져가는 형태의 농업협력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극동 아무르주를 기반으로 이미 농작물 재배를 시작한 북한은 이 지역의 농지 임차 규모를 늘리는 한편 다른 극동 지역으로도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²³⁾ 또한 채소 재배, 목축, 가공 수산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1만 헥타르 토지를 임대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북한 근로자들의 전문성, 책임감, 규율성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바, 중국 이민자들의 극동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약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이주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 정부가 자국민 근로자를 ‘무제한’ 제공할 방침인 가운데, 이제는 모스크바 근교, 불가 지역 및 기타 지역까지도 기존의 중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⁴⁾ 이와 같이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대규모로 진출할 경우, 탈북자 문제가 처음 제기된 곳이 러시아 별목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최근에는 잠잠해진 탈북자 문제가 다시금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 “Russia’s new tactics of war shouldn’t fool anyone,” *The Washington Post*, August 27, 2014.

22) 외교통상부, 『러시아 개황 2013』 (서울: 외교통상부), p.185.

23)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 농업 협력에 가속도,” 『연합뉴스』, 2014년 11월 14일.

24)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인 근로자 북한인으로 대체할 계획,” 『Sputnik 코리아』, 2015년 4월 9일.

IV. 한국의 대응

1. 러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요망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러시아 국민의 인식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의 위협에 굴복한 전통이 없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침략하였지만 결국 정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들은 이를 또 하나의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족적 자존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으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인식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서방에 굴복하기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히 맞서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방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러시아 내부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서방 세계는 러시아 내 신흥 중산층 세력을 지원하면 그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대로 그들은 푸틴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²⁵⁾

다시금 대통령직에 복귀한 푸틴 대통령은 이미 충분히 권력을 향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제는 러시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통한 러시아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낸 지도자로 남기 위해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교활하다고 할 정도로 전략적이며 실리적인 그러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 그는 이미 영웅이다!”

2. 인적 네트워크 관리

미국은 시스템이 지탱하는 나라라면, 러시아는 사람이 지탱하는 나라이다. 더구나 러시아는 스스로도 강조하듯이 유라시아 국가로서 동양적인 사고와 문화가 적지 않게 배어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러시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

25) “Western delusions triggered conflict and Russians will not yield,” *Financial Times*, September 14, 2014.

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러관계가 정상화된지도 이제 25년이 경과하였는데 그동안 쌓인 인적 네트워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충분히 활용했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회의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필요할 때만 찾고 평상시에는 방치함으로써 귀중한 인적 네트워크를 상실하고, 추후 이를 복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국민들의 자긍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 기념식에 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것에 대해 “그는 300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러시아 국민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아쉬워한 일부 러시아 여론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전술한 EMP탄 개발 관련 두뇌 유출건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으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감정적 공감대와 북·러 간 비공식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러 압박에 영향을 받아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정부 차원에서 대러 외교가 다소 침체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⁶⁾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이외에도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계,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채널을 꾸준히 가동시켜 나가야 한다.

3. 러시아 역할에 대한 이해 촉구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성장, 일본의 첨단 기술, 한국과의 오랜 친선 관계, 그에 못지않은 북한과의 우호 관계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일 것” 이라면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신동방정책’ 추진의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였다.²⁷⁾ 그런데 동 정책 성공의 열쇠는 러시아 극동과 이웃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공조와 이 국가들로부터의 투자유치임을 감안할 때, 동북아 지역 상황 안정화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동북아 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인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통제되거나 해결되어야 러시아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러시아 측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신냉전 구도의 형성은 푸틴 대통령의 최대 아젠다인

26) 장덕준 (2014), p.296.

27) “푸틴,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재자 역할 해야,” 『연합뉴스』, 2014년 10월 18일.

‘신동방정책’ 추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내 불안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저하와 투자 기회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현재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푸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리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북러 군사 및 방산 협력에 대비

전술한 바와 같이 북러 간 군사 및 방산 협력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등 관련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바노프 전 국방장관은 국가 경제력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이 옛 소련 시절과 달리 구매국으로서 매력이 없어 이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맡는 무관부를 아예 폐쇄해 버렸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²⁸⁾ 오히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불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 넘긴 무기의 부품을 다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하였는 바,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북러 군사 및 방산 협력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군사 및 방산 협력이 새롭게 진전된다면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극동 지역 개발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 측에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첨단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등 관련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끝/

28) “러시아, 남북 차별적 군사외교 눈길,” 『아시아경제』, 2015년 5월 3일.